

서울시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14년 6월 28일 시행)

※ 문제 총평 :

유병준

난이도	상	중	하	문제 유형	이론	응용	법령
	1.총론	2.정책	3.조직		4.인사	5.재무	6.환류
단원별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ㄱ.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 ㄴ.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ㄷ.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ㄹ.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 ㅁ.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ㄹ, ㅁ
- ⑤ ㄱ, ㄴ, ㅁ

[해설]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은 ㉠, ㉡, ㉢이다. ㉠은 보수주의 정부관이다. 진보주의 정부관은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 반면, 보수주의 정부는 정부개입을 불신하고 시장의 자율을 중시한다. ㉡ 공공선택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지만, 관료제를 비판하고 시민에 의한 선택을 중요시 여긴다. ㉢ 행정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정부역할의 확대를 추구한다. [정답] ③

[정리]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구 분	진보주의(좌파)	보수주의(우파)
인간관	경제인관 부정	경제인(인간=경제적 인간) 합리적·이기적 경제인
자유/평등관	자유를 옹호(적극적 자유) 결과적 평등	자유를 강조(소극적 자유) 기회의 평등(균등) 강조
시장에 대한 평가	시장실패는 정부에 의해 치유가능(정부개입주의)	시장주의를 신봉 정부불신
정책 / 국가관	정부규제정책, 소득재분배 정책 / 복지국가, 개혁주의	규제완화와 시장지향적 정책 조세감면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2. 롤스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원초상태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 ②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6.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 ② 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 ③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 ④ 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 ⑤ 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 된다.

[해설] 정책의제설정요인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으로 사회적 유의성(중요성), 선례, 단순성, 해결가능성, 극적 사건 등이 있다. 선례가 있는 문제는 SOP에 따라 쉽게 의제채택이 되지만 선례가 없는 새로운 문제는 의제화되기 어렵다. [정답] ①

7. 사이어트(R. Cyert)와 마치(J. 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집행한다.
- ② 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 ③ 정책결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 ④ 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 ⑤ 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설]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집행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회사모형은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SOP에 의한 단기적 대응과 단기적 피드백을 중시한다. [정답] ①

8.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② 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 ③ 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를 말한다.
- ④ 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 ⑤ 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해설] ⑤ 크리밍효과와 호오손효과는 정책평가의 외적타당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⑤

[참고] 타당도의 저해요인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적 타당성 위협요인
① 선발(선정)요인 ② 역사적 요소 ③ 성숙요인, ④ 상실요인, ⑤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⑥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⑦ 측정(검사)요인, ⑧ 측정도구요인 ⑨ 회귀인공요인	① 표본의 대표성 부족 ②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③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④ 크리밍효과(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⑤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9. 성과의 측정은 투입(input)지표, 산출(output)지표, 성과(outcome)지표, 영향(impact)지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래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이수 후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하였으며, 이를 통하

공공기관 유형		고시된 예
공기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4개 기관
	준시장형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6개기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17개 기관
	위탁집행형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70여개 기관
기타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방과학연구소 등 170여개 기관

12.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② 개방형은 승진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 ③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 ④ 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 ⑤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해설] ③ 개방형 인사는 정치적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의 강화를 가져오게 된다. ② 개방형은 폐쇄형과 달리 승진기회의 제약을 가져오게되고, 직무가 폐지되었을 때 타 부서로 이동하기보다 퇴직으로 이어진다.

[정답] ③

13.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게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 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 ①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 ② 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o effect)
- ③ 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 ④ 규칙적 오차(systematic of error)
- ⑤ 시간적 오차(recency of error)

[해설] ① 피평정자에 대해 평정자가 지닌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 선입관에 의해서 평정하는 오류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 즉 상동(相同)적 오차에 해당한다. [정답] ①

14.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②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④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⑤ 국가채무관리계획

[해설] 국가재정법 34조를 알아야하는 지엽적인 문제이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국고보증채무관리계획이 있지만, 이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는 아니다. [정답] ⑤

[참고 법률]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지출액 등
-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 [관련법률]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충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15.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③

[관련법률] 국가재정법 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6.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④ 행정협의회
- ⑤ 갈등조정협의회

[해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지방자치법 168조). [정답] ①

